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3일오후 10시25분 尹선포, 한시간 뒤 계엄사설치·포고령 발표 국회,이튿날오전 1시해제 요구안의결···계엄군한시간만에철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을 전격 선포하고 국회가 4일 새벽 '무 효'를 선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 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러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채 극비리에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 령부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 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 청장에게 정위치 근무하라고 지시했 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 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 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이처럼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여의도에선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 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 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 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 0명의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본회의장 에 모여야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제히 의 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 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 원·보좌진과 계엄군 간의 대치가 벌어 졌다

이미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 문을 막은 상태에서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인 국회의원은 4일 0시쯤 약 60명이었지만, 국회의 비 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 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에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



국회 본청 진입한 계엄군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4일 새벽 특전사 군 병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자, 보좌진 등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이날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고 고성으로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 행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 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1시간 만에 철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국회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 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처리도국가본질기능과마 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 든주요예산을 전액 삭감하여국가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공황상태로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4 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 업 등 4조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 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 민국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 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 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루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 정이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

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 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 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 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 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

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 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 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 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 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 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 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 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월3일비상계엄선포시간대별상황 언론발표시간기준

12월 3일

21:30 '윤석열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21:50 방송사들사이에서 '긴급정부발표가 있으니 중계 연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 공유(대통령실 내 브리핑룸 앞에 다수 기자들이 집결했지만 문이 잠겨 입장이 불가능, 대통령실 22시 넘어서도 '불통' 상태)

22:23 윤대통령의긴급담화생중계시작(담화문낭독약6분간)

22:28 윤대통령, 야당 감액예산 강행·연쇄 탄핵에 "비상계엄선포"

헌법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하여 계억을 서포함스 있다'

22:42 민주, 비상계엄선포에 국회로 의원들긴급소집

23:00 담화문전문언론배포 / 23:09사진언론배포

23:04 국회출입문폐쇄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23:27 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23시부로발표

12월 4일

00:07 계엄군국회경내진입

00:22 계엄군국회본청출입문봉쇄

00:45 계엄군국회본청진입

00:49 국회본회의개의

01:01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 국회본회의 가결 재석 190인 중찬성 190인(야당의원 172명, 국민의힘 친한계 18명)

국회의장실"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

● 헌법제77조5항'국회가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 계엄의해제를요구한때에는대통령은이를해제하여야한다'

02:01 우원식국회의장 "윤대통령·국방부에 계엄해제요구통지보내"

04:22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04:27 윤대통령, 생중계 담화통해 비상계엄 선포해제. 군설치 계엄사령부해체

04:30 정부, 국무회의 열어 '계엄 해제안' 의결 발표

ଡ଼ 연합뉴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 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 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

지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 고,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 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

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 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 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 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 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尹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

제를 선언했다. 전날 오후 10시23분께 대국민 담화에 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 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 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 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 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 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 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 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 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 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1면 '또 군홧발에 짓밟힌 민주주의'서 계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 남지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10분 광주 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 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법적 인 공권력 행사"라며 "비상계엄은 전 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우 예외적으 로 선포돼야 하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 에 전혀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던 것을 두고 민변은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전대·조대교수·학생들도'충격' 1980년 5·18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광주지역 대학가도 충격에 휩싸였다.

전남대학교 교수회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언에 아연실색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가결해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고 말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SNS를 통해 "경각심을 갖고 지금 의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해 혹시라도 학우들에게 미칠 악영향이나 파장이 발견된다면 즉시 알리고 최대한 빠르 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 수연구자협회) 조선대 지회도 "전날 밤 윤석열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1 50분짜리 친위쿠데타는 즉각적인 국민의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에 묻혀 한편 의 저급한 코미디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CMYK